

## 누가 오키나와를 버림돌[捨石]이자 썰기돌[要石, keystone]로 만들었는가

김도민\*

[서평] 나리타 지히로(2022), 임경화 옮김,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류큐/오키나와의  
귀속과 기지 문제의 변용』, 소명출판, 434쪽

미군은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일본군과 오키나와에서 치열한 지상전을 펼쳤다. 일본은 본토 사수를 위해 오키나와를 분리해 버리는 이른바 ‘버림돌’[捨石]작전을 펼쳤다. 당시 오키나와는 “일본군의 강제에 의한 집단자살이 자행되는 끔찍한 공간”이었다.<sup>1</sup>

일본의 패전 이후 전후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1947년 유럽에서부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도 1949년 중국 대륙에 공산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냉전의 대립은 명확해지고 있었다. 냉전의 이분법적 대립이 강화될수록,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치른 적대국이기보다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를 위한 ‘동맹국’이어야 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은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선이 급격히 밀리자 다급해졌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냉전의 핵심 파트너로서 일본의 위치를 확정했고, 연합군이 포츠담선언(1945.7.26.)에서 견지했던 식민과 전쟁의 책임을 일본에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1951년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유진영의 국가들만 참여한 반쪽짜리 회의가 열렸다. 이때 일본에게 매우 관용적인 강화

\*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1 진필수(2019), 「오키나와 일본복귀론의 재검토」, 『로컬리티 인문학』 22, pp. 255-256.

조약이 체결됐고, 이로써 일본은 미군정이 끝나고 주권을 회복했다. 이렇게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차별적인 동아시아 냉전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 미군기지로써의 썬기돌은 바로 ‘오키나와’였다. 결국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에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동시에 강화조약 제3조에 따라 오키나와를 일본에서 분리시켜 미국의 시정권하에 두었다.<sup>2</sup>

이처럼 미국은 동아시아 냉전체제로서 오키나와라는 태평양의 썬기돌(keystone)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과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이른바 바퀴살 모양의 허브-스포크(Hub-Spoke)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일본에게 2차대전 당시 버림돌이 되었던 오키나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미국의 썬기돌이 되기 위하여 일본에게 다시 한 번 분리되는 버려진 돌이었다.

일본의 버림돌이자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썬기돌이던 오키나와는 2차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과중한 기지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1972년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되었으며 올해 2022년은 반환으로부터 반 세기가 흘렀지만, “미국은 전후 일관되게 ‘극동에 위협과 긴장이 존재하는 한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현재의 권력과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른바 ‘블루스카이 정책’(blue sky policy)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2022년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거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일본에 의한 버림돌이자 미국에 의한 썬기돌로서의 오키나와의 고통스러운 ‘위치’는 바뀌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는 “약 70%의 미군기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오키나와섬”은 “약 15%가 기지”라고 한다.<sup>3</sup>

2 202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70년을 맞아 최근 동아시아 냉전을 오래 연구한 국내의 역사학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의 연구서가 출간되었다. 김영호·이태진·와다 하루키·후더쿤·알렉시스 더든·하라 기미에 편(2022),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냉전과 식민지·전쟁범죄의 청산』, 메디치미디어.

3 나리타 지히로(2022), 「왜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맥락에서 오키나와 반환을 바라보아야

어떻게 해야 전후 약 100년간 지속된 버림돌이자 썰기돌로서의 오키나와의 현 상황을 바꿔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동아시아의 냉전적 적대성에 기반하여 구축된 샌프란시스코체제와 샌프란시스코체제가 만들어 낸 동아시아 미국 군사안보체제의 썰기돌로서의 오키나와의 역사적 형성과정, 바로 한국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1. 동아시아 냉전 ‘주변부’의 트랜스내셔널한 관계사

이 책은 오키나와가 2차대전 당시 오키나와 전투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일본으로부터 분리당한 버림돌이자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핵심 기지인 썰기돌로 구축되는 일련의 과정을, 일본에 반환되는 1972년까지 약 20년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잘 보여 준다. 특히 본 저작은 그동안 “국제정치학, 일본 외교사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 관계의 틀 안에서만 파악되어왔던 오키나와 반환 연구의 지평을 한국과 대만의 “인식이나 일미와의 교섭을 1차자료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확장시켰다. 이는 한미 관계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한국현대사 연구가 최근 다른 행위자들까지 포함한 연구로 확장되는 흐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제 냉전사 연구의 경향도 베스트(Odd Arne Westad)<sup>4</sup>처럼 제3세계라는 냉전의 주변부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본 저작은 기존의 냉전사 연구가 중심과 주변부의 관계, 혹은 주변부와 주변부의 관계를 다루는 데서 더 나아가, 일본과 미국에 의해 중층적으로 주변화된 이른바 ‘이중의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또

하는가], HK+ 중앙대·한국외대 접경인문학연구단, 『오키나와 ‘반환’ 50년을 성찰하다: 오키나와 반환 50주년 기념 집담회 자료집』, p. 23.

4 오드네 베스트(2020), 옥창준 역, 『냉전의 지구사』, 에코리브르.

다른 냉전의 최전선이자 주변부인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동아시아 냉전 ‘주변부’ 간의 트랜스내셔널한 관계가 실제 어떻게 엮여서 작동하는지 그 매커니즘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제3장 오키나와 반환 문제의 초점화」와 「제4장 오키나와 ‘반환’ 결정」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후반 박정희정권은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될 경우 미군 기지 사용에 있어 일본과 사전협약이 필요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우려를 표출했다. 특히 한국은 1968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켜져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일본 반환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박정희정권은 미국에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일본에 반환된다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한국의 제주도로 이전시키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sup>5</sup> 결국 한국과 대만 정부 모두가 “오키나와의 군사기지 기능 유지에 합의”한 후에야 미국과 일본 간의 오키나와 반환은 결정될 수 있었다.<sup>6</sup>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어 오키나와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어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안보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부여 받았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72년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복귀되었지만, 한국과 대만은 1960년대 후반 일미 간의 반환 논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오키나와의 변함없는 군사기지로서의 기능 유지를 요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지 70년, 오키나와가 반환된 지 50년이 됐지만, 샌프란시스코체제에서 연원하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냉전적 군사 안보체제의 쐐기돌로서의 오키나와의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분단된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싼 적대적

5 나리타 지히로(2022), 임경화 역,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소명출판, p. 224.

6 고마쓰 히로시(2022), 「오키나와 현대사에서 바라보는 오키나와 반환의 의미」, HK+ 중양대·한국외대 접경인문학연구단, 『오키나와 ‘반환’ 50년을 성찰하다: 오키나와 반환 50주년 기념 집담회 자료집』, p. 7.

인 동아시아 냉전체제는 샌프란시스코체제에서 기원하는 미군 군사기지로서의 오키나와를 그 중심에 두고 형성되었다.

## 2. ‘위로부터의 역사’와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결합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 오키나와 관련하여 문학과 외교 영역에서 상당한 연구들이 축적됐다.<sup>7</sup> 문학 관련 연구들을 읽으면 오키나와 현장의 아픔을 오키나와 문학작품이 어떻게 재현했는지를 잘 드러내 주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공감을 넘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해지기 쉽다. 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목적이 어떻게 오키나와의 운명을 좌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오키나와의 국제정치적·제도적·지역적인 ‘위로부터의’ 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혹은 위로부터의 관점에서만 오키나와를 이해할 경우 오키나와 현장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배제되며, 우리들은 결국 국가 혹은 국제정치로부터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막연함과 수동성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위로부터의 시각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냉전의 정치외교사와 사회문화사가 분리되어 연구되는 경향에서 벗어나 ‘외교사’와 ‘사회사’의 “창조적인 결합”<sup>8</sup>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 연구들은 각자의 학문분과에 통용되는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진행되어 왔다. 즉 정치의

7 손지연(2020), 『전후 오키나와 문학을 사유하는 방법』, 소명출판; 조정민(2017), 『오키나와를 읽다: 전후 오키나와 문학과 사상』, 소명출판; 야마시로 세이쥬 외(2020), 광형덕역, 『오키나와문학 선집』, 소명출판. 최희식(2011),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5집 1호; 조양현(2011), 「데탕트 체제 전환기의 한일관계: 오키나와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사례로」, 『국제·지역연구』 20권 1호.

8 권현익(2013),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p. 28.

교사는 다국적 외교사료에서 드러나는 각국의 정책 변화 양상을 밝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반면 사회문화사는 현장을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집중한다. 이처럼 분과학문 체제라는 현실 속에서 아래와 위를 함께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본 저작은 이를 일정 부분 성취해 냈다.

먼저 이 책은 위로부터의 역사라는 국가 차원의 관계에서 한국인들에게 오키나와 문제가 나와는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오키나와의 문제는 직접 결부되어 있음을 자각하여 오키나와만의 문제로만 치부되는 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동시에 오키나와 주변 지역의 희생 위에 성립된 동아시아 냉전질서하에 한국과 일본 본토의 경제적 번영이 가능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저자는 냉전체제라는 구조적 차원뿐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이 한반도 위기와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추가 배치된 미군 B52 폭격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피해의 실상도 잘 보여 준다.

또한 본 저작은 오키나와 현지의 운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어떻게 미국의 정책 변화라는 위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했는지도 제시한다. 특히 1956년 오키나와 섬 전체의 저항운동이 일본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로 작동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한다. 1953년 4월부터 류큐열도 미국 민정부(USCAR)가 “군용지의 강제 수용절차를 정한 ‘토지수용령’을 공포하고 ‘총검과 불도저’라 불리는 강권적인 군용지의 수용을 개시하여 주민과의 사이에 토지를 둘러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sup>9</sup> “1956년 6월에 오키나와 현지에서” 미군의 군용지 관련 방침을 기본적으로 용인하는 미하원 군사위원회 조사단의 단장인 프라이스의 “권고가 공표되자 ‘섬 전체 투쟁’이라 불리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sup>10</sup>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을 겪고 일미 양국 정부도 오키나와에 대한 새로운 조치의 검토를 개

9 나리타 지히로(2022), 임경화 역,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소명출판, p. 100.

10 나리타 지히로(2022), pp. 102-103.

시하게 되었다.”<sup>11</sup> 이처럼 주민의 투쟁이 관계 국가들의 외교행위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만약 저자가 각국의 외교사료에만 의존하여 서술했다면 오키나와 반환은 “안전보장상의 불안을 안고 있는 한국정부와 국부에 의한 계속적인 압박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환 후에도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유지”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sup>12</sup> 그런데 저자는 오키나와의 반환의 과정에서 현지 “주민의 기지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일은 없었”<sup>13</sup>으며 일본과 한국, 대만의 경제적 변영은 “계속 가중된 기지 부담을 강요당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성립”됐음을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sup>14</sup> 이는 저자가 위로부터의 시각을 담은 외교사료에 입각하여 역사적 실증을 전개하면서도 동시에 오키나와 주민들이라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계속 견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였다.

다만 서평자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오키나와의 행위가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1968년 오키나와의 저항 때문에 반환이 논의 대상이 됐다고 서술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다. 왜 1969년 시점에서 오키나와 반환 결정 논의가 진행됐을까. 이 시점을 전후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의 전략은 어떠했을까. 오키나와 주민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전략이 변화하는 시기였기 때문은 아닐까. 혹은 미국과 중국의 테탕트가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혹은 저자도 언급했듯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감축을 주된 목표로 삼았으며, 이에 일본과 한국은 모두 자

11 나리타 지히로(2022), p. 104.

12 나리타 지히로(2022), p. 398.

13 나리타 지히로(2022), p. 396.

14 나리타 지히로(2022), p. 398.

주국방으로 전환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sup>15</sup>

물론 저자의 실증처럼 미국과 일본 외교문서에서 1968년 오키나와 주민운동이 언급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교문서에 언급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미국과 일본 정부가 반환논의를 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반환논의를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주민운동이 활용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의 운동이 ‘활용’된 것인지, 아니면 오키나와 주민의 운동이 미일의 정책 변화를 ‘추동’한 것인지, 정책변화와 주민운동을 시간 순으로 놓고 면밀히 따져 본다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 3. 오키나와 주민의 다양성

저자는 본래 본인 연구의 출발은 오키나와 현지의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2010년 무렵부터 복귀운동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으며 “섬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학 논문을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여러 차례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저자의 출발점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의 시각이 결여”되지 않는 정치외교사 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이처럼 냉전의 주변부의 관계를 통해 기존의 냉전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저자 나리타 지히로는 자신의 연

15 나리타 지히로(2022), p. 384.

16 나리타 지히로(2022), 「왜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맥락에서 오키나와 반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HK+ 중앙대·한국외대 접경인문학연구단, 『오키나와 ‘반환’ 50년을 성찰하다: 오키나와 반환 50주년 기념 집담회 자료집』, p. 24.

구가 백영서가 출간한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2013)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에 큰 자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한 인연으로 이번 한국어 번역서 맨 앞에 백영서의 상세한 해제가 실리기도 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저자는 해당 각국의 시기별 외교관계의 전개 과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면서 오키나와 현장의 ‘주변부’의 관점을 대비시켜 현지의 ‘요구’가 어떻게 국가 간 관계에서 외교 행위자들에 의해 좌절되는지를 보여 준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기존의 정치외교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백영서의 핵심현장이라는 문제의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증 연구에 포함시켰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오키나와라는 주변부의 시각은 언제나 올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백영서의 지적처럼 오키나와라는 “주변을 특권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이 주변에 있고 중앙으로부터 차별당함을 문제 삼고 동시에 자신이 한층 더 주변적 부분을 차별하고 억압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중앙의 문제됨을 다시 묻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의 사고방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자신보다 한층 더 주변적인 부분을 차별하고 억압하며 그러한 억압이상을 의식하지 않는 ‘중앙으로부터의’ 시각을 접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물어야 한다.<sup>17</sup>

‘이중의 주변부’로서 오키나와인들도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주민이다. 실제 “기지의 섬으로서의 오키나와의 특수성 때문”에 “오키나와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이 70%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한다. 또한 오키나와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본토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이나 “주둔 미군기지와 관련된 종사자가 3만여 명을 넘”으며, 이들 대다수는 “미군기지 덕에 먹고사는 형편”이다. 이처럼 “오키나와는 독자적 산업이 없어 중앙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일본과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sup>18</sup>

17 백영서(2013),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pp. 31-32.

18 박경훈(2013), 「오키나와 헤노코에서 떠올린 제주 강정」, 『제주의 소리』, 2013년 3월 17일.

따라서 본 저서가 다루는 시기의 오키나와 주민들 모두가 미군기지에 반대만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일본으로 오키나와의 복귀가 논의될 때 이를 둘러싼 복잡한 현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존재했을 것이다. 본 저작이 주민들이 미군기지와 일본 복귀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포함해 서술하면서, 특히 이들의 시선 중에서 어떤 시선이 주변부의 차별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다수였는지 소수였는지 보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4. 식민경험이라는 약소민족으로서의 공감력 그리고 연대

마지막으로 본 서평자는 다양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선 중에서 반전 평화론으로서 제3세계 연대론을 주창했던 시선에 대해 더 고민해 보자 한다. 2019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출간된 오세종의 저작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조선인의 ‘가시화/불가시화’를 둘러싼 역사와 담론』은 오키나와 주민 내부에서 제3세계와의 연대가 모색되는 시도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 28일 결성된 오키나와현조국복귀협의회가 추진한 1960년대 복귀운동의 성격은 “내셔널리즘에 호소하는 측면과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에 입각한 제3세계와의 국제적 연대 모색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sup>19</sup>

이러한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은 오키나와와 한국의 공통된 식민경험에 기반하고 있었다. 1950년대까지 한국과 대만, 오키나와의 주민들은 탈식민

19 오세종(2019),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소명출판, pp. 169-171. 1950, 60년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통해서 전개되었던 오키나와와 북한 간의 국제연대운동의 역사”에 대한 임경화의 연구도 존재한다. 임경화(2015), 「‘분단’과 ‘분단’을 잇다: 미군정기 오키나와의 국제연대운동과 한반도」, 『상허학보』 44집, p. 233.

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각국의 식민경험은 2차대전 이후 점차 탈각, 혹은 후경(後景)화되고, 1960년대에는 냉전적인 적대에 기초한 안보 및 경제발전이 전경(前景)화 되었다. 본 서평이 다루는 책에서도 2차대전 이후 약 20년 동안 동아시아의 탈식민 문제가 냉전체제의 구축과 심화 속에서 탈각되거나 냉전과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는 양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중반 오키나와의 섬 전체 투쟁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류큐는 한국처럼 일본의 무력에 의해서 강점하고 극도로 착취할 때까지는 독립적인 도서(島嶼)왕국이었”으며 “일본의 침략적인 팽창의 꿈을 실현하는 데 제1보가 될 류큐의 일본 지배하로의 복귀를 시인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미국은 자결권과 개인적 자유권의 강력한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입장을 재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0</sup> 또한 1957년 7월 1일 한국정부는 “류큐의 식민지화를 배격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sup>21</sup>

탈식민의 문제는 본 저서가 다루는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실패의 역사적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한국은 1950년대 이승만정권은 일본의 ‘재군사화’를 탈식민의 관점에서 비판했으며, 일본이 좌경화되어 반공연대를 이루기 어려운 국가로서 상정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집단방위체제는 구축되지 못했다. 이후 1960년대 박정희정권은 반공안보의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며 일본과 함께 하려 했으나 외려 일본이 국내 ‘저항’을 우려하여 경제 중심의 지역협력체제인 아시아태평양협의회(Asia Pacific Council, ASPAC)를 만들었다. 비록 경제 중심이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주도하에 일본을 포함한 지역 협력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1950년대와는 다른 커다란 변화였다.”<sup>22</sup> 또한 한국은 베트남전쟁 이후인 “1968년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sia Pacific Treaty

20 나리타 지히로(2022), p. 111.

21 나리타 지히로(2022), p. 110.

22 나리타 지히로(2022), p. 177.

Organization, APATO)의 설립을 제창하는 등,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자유주의 국가를 구성원으로 한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동아시아에서의 집단안전보장체제는 구축되지 않았다.”<sup>23</sup>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집단방위체제가 성립되지 않은 까닭은 동아시아 냉전 체제 하에서 청산되지 않은 식민문제가 그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겪어 온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까. 수평적이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구축된 냉전적인 적대성에 기반한 샌프란시스코체제를 넘어서야 하며, 그것의 출발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봉인하고 배제해 온, 오키나와와 한국 그리고 대만의 공유된 약소민족으로서의 식민경험이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HK+ 중앙대·한국외대 접경인문학연구단(2022), 『오키나와 ‘반환’ 50년을 성찰하다: 오키나와 반환 50주년 기념 집담회 자료집』.
- 권현익(2013),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 김영호·이태진·와다 하루키·후터쿤·알렉시스 더든·하라 기미에 편(2022),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냉전과 식민지·전쟁범죄의 청산』, 메디치미디어.
- 나리타 지히로(2022), 임경화 역,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소명출판.
- 박경훈(2013), 「오키나와 헤노코에서 떠올린 제주 강정」, 『제주의 소리』, 2013년 3월 17일.
- 백영서(2013),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 손지연(2020), 『전후 오키나와 문학을 사유하는 방법』, 소명출판.
- 야마시로 세이쥬 외(2020), 광혁덕 역, 『오키나와문학 선집』, 소명출판.
- 오드네 베스트(2020), 옥창준 역, 『냉전의 지구사』, 에코리브르.
- 오세중(2019),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소명출판.
- 임경화(2015), 「‘분단’과 ‘분단’을 잇다: 미군정기 오키나와의 국제연대운동과 한반도」,

『상허학보』 44집, pp. 229-269.

조양현(2011), 「테탕트 체제 전환기의 한일관계: 오키나와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사례로」, 『국제·지역연구』 20권 1호, pp. 61-87.

조정민(2017), 『오키나와를 읽다: 전후 오키나와 문학과 사상』, 소명출판.

진필수(2019), 「오키나와 일본복귀론의 재검토」, 『코컬리티 인문학』 22, pp. 229-277.

최희식(2011),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5집 1호, pp. 289-323.

